

중국 新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1. 개요

- 내외자기업 소득세 통합을 골자로 하는 중국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1차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12월 29일 중국 재정부 세정사(財政部稅政司) 스야오뵘(史耀斌) 사장은 12월 24일 개최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1차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함.
- 그는 동 초안이 2차 심의를 거치고 3월에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를 통과 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주요 언론과 정부는 내외자 기업에게 서로 다른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소득세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1)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국경제현안브리핑 제06-14호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수우대와 그 부작용>을 참조.

2. 기업소득세법 초안의 주요 내용

□ 4가지 통일(四个统一)

- 기업소득세법 초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4가지 통일’은 내외자 기업에게 동일한 기업소득세법 적용, 25%의 일률적인 기업소득세율 적용, 과세소득 공제 방법과 기준의 단일화 및 규범화, 세수 우대정책의 단일화를 의미함.

□ 기본세율 25%로 확정

- 명목세율 기준으로 중국 내자기업에 33%,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15% 및 24%를 적용하던 현행 기업소득세율을 25%로 단일화함.
- 이에 따라 현재 중국기업 소득세율의 근거 규정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와 외자기업 소득세율의 근거 규정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이 하나로 통일됨.
- 25%의 세율은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세계 159개 국가들의 평균 기업소득세율인 28.6%, 중국 주변 18개 국가들의 평균 기업소득세율인 26.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고려한 것임.

□ ‘기업소득세법’ 공포 전 설립된 기업에게 5년간의 과도기간 부여

- 재정부 쩌런칭(金人庆) 부장은 이 법안으로 인한 기존 외자기업의 세수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법안 공포 이전에 설립 허가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단일화 법안 공포 이후에도 5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기존의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명시함.
- 즉, 현행 세법 기준에 따라 15% 및 24%의 저세율 우대를 받던 외자기업과 ‘两免三减半²⁾’

2)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생산형 외자기업에 대해 이익발생 년도를 기준으로 제 1~2차 년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제

의 우대를 받던 외자기업 모두 단일화 법안 시행이후 최대 5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새로운 법의 규정을 받음.

- 단, 기존 투자기업이 새로운 세법 시행 시점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세제를 누리지 않았을 경우 우대기간은 새로운 세법 실시 연도부터 계산함.

□ 과세소득 공제 규정의 단일화

- 내외자 기업에 대한 과세소득 공제규정의 차이가 매우 커 중국 내자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공제규정 단일화에 관심이 집중됨.
- 특히 임금급료의 지출에 있어 법정 세금계산 임금기준 내(1인당 매월 1,600위안)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하는 현행 규정을 실제 지급한 임금에 근거하여 공제하는 방식(외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방식)으로 바꿈.
- 기부금의 경우 당해 연도 이윤총액의 10% 이내에서 공제를 허가하고, R&D 비용의 경우 실제 비용의 150%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 과세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광고비의 경우 지출이 당해 연도 영업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실비에 근거하여 공제 가능하고, 초과 부분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공제함.

□ 각종 우대 정책 조정

- 생산형 외자기업에게 시행했던 两免三减半 혜택과 수출형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모두 폐지함.
- 국가가 중시하는 하이테크 기업에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창업에 투자하는 기업과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안전생산 등 전문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를 확대

3~5차 년도에는 50%만을 징수하는 우대 정책.

함.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유지하고 서부대개발 지역의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함.

□ 조세회피 방지 규정 강화

- 이번 기업소득세법 초안에서는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이전가격 조작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각종 조세회피 관련 방지 조항, 체납금 추가징수 등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함.
- 또한 세율이 낮은 역외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기업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함³⁾.

3. 전망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초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국무원이 더욱 세분화된 새로운 실시조례를 내놓을 계획이며, 외자기업에게 주어지는 과도기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 도이치 은행(Deutsche Bank) 중국지점 수석 경제학자 마쥘(马骏) 박사는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 조치가 해외 상장한 중국자본기업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
- 그는 2008년부터 세계개혁으로 인한 이들 기업의 과세 후 전체 연수익이 6%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
- 또한 석유, 전신, 은행 및 대다수 채광 업종의 중국기업이 세계 단일화의 주된 수혜자라

3)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인을 국제관례에 따라 주민 기업과 비주민 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중국 법률에 의거해 중국에 설립되었거나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에 있는 기업은 모두 주민 기업으로 모든 수입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는 반면, 외국 법률에 의거해 중국에 설립된 비주민 기업은 중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가 있음.

고 분석

- 중국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리유환(刘桓) 부원장은 기업소득세 단일화 법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기업으로 경제특구에 있는 非하이테크 외자기업을 지적함.
 - 또한 마쥘 박사는 非 과학기술 분야의 해외 상장 중국자본기업에게는 이 법안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 마쥘 박사는 단기적으로 볼 때 소득세 단일화 조치로 인하여 정부의 소득세 수입이 2008년에 1,000여 억 위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장기적으로 세제 개혁으로 인한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힘.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는 58만 6,000여 개이고 내자기업의 수는 3,300만 개로 외자기업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내자기업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됨.
 - 또한 리유환 부원장은 단일화법의 시행으로 假외자 방식의 조세 회피가 어려워져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관리가 유용하고 세무환경의 개선에도 유익할 것으로 전망

<참고 자료>

- 《中国经济时报》, “内外资企业所得税拟“四统一””, 2006.12.25
- 《21世纪经济报道》, “25%! 两税合并草案初解”, 2006.12.22
- 《中国青年报》, “两税合并将使海外上市中资企业受惠”, 2007.1.5
- 《每日经济新闻》, “叶檀: 内外资所得税合并只是企业国民待遇第一步”, 2006.12.25
- 《经济参考报》, “专家表示: “两税合并”不影响外资进入中国”, 2007.1.19
- 《上海证券报》, “企业所得税法草案首次审议 明确新税率为25%”, 2006.12.25
- 《东方早报》, “两税合一 内资企业谁最受惠”, 2006.12.25